

신당-민주 '합당 추인' 막판 빼걱

'특정세력 배제론' '지분' 이견

민주도 '小통합-大통합' 내홍

지난달 31일 통합 합의문 작성에 따라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던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통합 협상이 '특정세력 배제론'과 '지분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부 주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내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통합 협상은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봉균 의원 등이 민주당과 합의한 협상 내용을 논의했으나 특정세력 배제론과 관련된 합의 구문가 '핵심적 국정 실패 책임자 배제' 등으로 적시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특정세력 배제론의 표현은 많이 완화됐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곧 대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심적 국정 실패 책임자라는 문구도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추후 배제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



민주당 박상천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주재, 중도개혁통합신당과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됐다.

지도부 구성문제 등 지분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민주당 4명, 중도통합신당 3명의 비율로 정해지고 중앙위원회의 구성도 민주당 90명, 통합신당 80명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점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도체제는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 형식으로 합의됐지만 주요 회의 주재를 '연장자'가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는 형태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번 주말 내에 민주당과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통합 협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내부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민주당 중앙위원회의는 박상천 대표 측 원외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통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이날 박 대표는 DJ와의 면담 결과 및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통합협상 과정 등을 설명하며 중도개혁세력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원외 인사들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소통학문에 힘을 실는 한편 대통합론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달아내놓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

이에 맞서 범여권 대통합론 성향의 일부 원외 인사들은 기본적인 통합의 원칙론 등을 내세워서 별다른 호응을 못 받고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협의의 원들은 이날 중앙위원회의에 집단 불참, 박상천 대표의 소통합론에 행동으로 맞섰으며 향후 열린우리당 탈당 세력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범여권 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도통합신당과의 최종 협상에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장관급회담 결국 결렬

대북 쌀 차관 지연 문제 막혀...차기 일정 못잡아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대북 쌀 차관 제공 지연 문제에 막혀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아무 성과없이 종료됐다.

남북은 1일 오후 3시20분부터 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동보도문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차기 회담 일정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쌀 차관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북측의 완강한 식량 제공요구에 따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고려항공 전세기 편을 통해 인천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바스프 여수산단에 600억 투자 새공장 설립

독일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 업체인 한국바스프(주)가 여수산단에 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새 공장을 짓는다.

한국바스프 1일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오현섭 여수시장, 헐만 크라우치(Dr. Tilman Krauch)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 사장, 한국바스프 조진우 회장,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팀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자동차 및 건축관련 산업에 주요 소재로 공급되는 폴리우레탄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인 이 여수공장은 올 하반기 600억 원을 투자, 폴리우레탄 원료 생산의 주요 설비인 스팀 제조공장(1일 180t 생산) 건립에 들어

어간다. 이 공장은 오는 2009년 6월 말까지 완료돼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이번 신규 투자는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폴리우레탄(MDI) 제품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스프는 지난 1954년 한국에 진출해 석유화학, 폴리우레탄, 경밀화학 및 기능성 제품 등 각종 화학산업 제품들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외국기업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바스프는 1천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서울 사무소와 울산, 여수, 군산, 안산 공장에 근무하며 지난해 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정준씨 등 5명 호암상 수상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1일 서울 종로구 호암아트홀에서 2007년도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과학상 정상우 박사(50·미 렉스대 석좌교수 겸 포항공과대 석학교수) ▲

공학상 엄창범 박사(49·미 워스콘산대 교수) ▲의학상 서동철 박사(46·미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예술상 이정준씨(68·소설가) ▲사회

학상(68·기자)이다. 이정준씨는 1965년 등단 이래 40여년간 100여편의 중·단편과 13편의 장편소설, 30여편의 작품집을 출판하며 한국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검찰, 최기문씨 자택 등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일 한화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본사, 최기문 전 경찰청장,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개인 컴퓨터 및 각종 문건과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한화증권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시왕 고문은 김회장이 경찰에 소환되면서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 청장은 통상적인 전화 통화였으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최 전 청장은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 흥영기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곤남대문서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감찰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 청장 퇴진 글 강력 조치

경찰 지휘부가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경찰 간부들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는 지난 달 29일 박명자 행정자치부장관의 특별지시 후 지방경찰청별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박 장관이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후 강희락 경찰청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 뒤 지방청별로 다시 회의를 열어 이를 전달토록 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경찰 간부는 "서울경찰청이 서장 회의를 통해 '평소에 인터넷에 글 올리는 직원들을 특별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강희락 차장은 '인터넷 게시판에 이택순 경찰청장 퇴진 요구를 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나 자료수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으므로 별도 자료수집은 필요 없다"라고 밝혀 경찰 내부적으로 도종의 대응조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시 설

감사원까지 '불합리' 지적한 국고보조 기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 비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지방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나 지방세 수입이 넘쳐나는 도시 지역 자치단체에 똑같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자체에 일정 비율로 자체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매칭펀드' 시스템을 적용해 지방자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가용재원 285억원 가운데 30.2%인 86억원을 기초생계급여 및 보육급여사업에 충당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사업에 가용재원 5천615억원 중 불과 1.8%인 101억원을 부담

했다.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제정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부문에 쓸어 보내는다면 그 지자체는 신규 개발 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갈수록 복지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 국고보조 기준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지자체 간 재정 현상은 방치해 서는 국토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함께 국고보조제도의 불합리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보조 기준비율을 현실에 맞게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반인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차질을 빚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는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도 없다. 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투기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신도시보다는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노후된 대통령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된다.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부추겨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차질을 빚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는 '블랙홀'이다. 비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수도권은 비해 지자체에 차별화를 부른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차질을 빚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노후된 대통령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외쳐서는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균형발전 정책의 포지를 먼저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분당급 신도시 동탄 옆으로

분양가 800만원대...10만5,000가구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10만5천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26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 660만평에 아파트 10만가구, 단독주택 5천가구 등 총 10만5천가구를 짓는 내용의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지정을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중인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곳으로

로 기준 동탄1지구와 합하면 면적은 총 933만평, 가구수는 14만6천가구가 돼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새로 지정된 신도시는 내년 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데 이어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로 예정됐다. 인구 밀도는 ha당 120명, 녹지율은 28%로 분당(인구밀도 199명, 녹지율 20%)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는 낮고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지정을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중인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곳으로

/연합뉴스

대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품폐이지 계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

면적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건설원